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급식실 환경개선 예산 집중 투입해야"	2
江原日報	03면	“스마트기기 보급, 道 실정 맞는 세부계획 필요”	3
KBS 춘천	온라인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주력...인력 부족에 전문성 우려도	4
G1방송	온라인	강원연구원, 송방망이 징계 '논란'	5
강원도민일보	22면	전찬성 도의원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6
江原日報		전찬성 도의원, 신성열 춘천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 ‘친...	7
위클리오늘	온라인	전찬성 강원자치도의원,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	8
江原日報	21면	원미희 도의원 대한민국공헌대상	9
강원도민일보	04면	양양서 강원농업의 미래 워크숍	9
江原日報	04면	“문화예술교육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10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노인을 능력 있는 주체로 바라보기	11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진종호(양양) 도의원	12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12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엄윤순(인제·원쪽)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홍...	12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김용복(고성·원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강정호(...	12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12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12
江原日報	21면	[동정]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산업부위원장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실질적 특례 담긴 강특법 3차 개정안 '국회 1호' 법안 추진	13
강원도민일보	02면	도교육청, 학교시설 환경개선 5년간 2조3639억원 투입	13
江原日報	02면	'건당 14만원' 고향사랑기부 전국 상위권	14
江原日報	02면	道 국가지방협력 특교세 2억 확보	14
江原日報	02면	김진태 지사 “강원FC 내년 투자 늘릴 것”	15
강원도민일보	02면	김 지사 "춘천 분구안 환영, 의석수 늘려 공룡선거구 해결을...	15
강원도민일보	01면	춘천 사회단체 단독분구 주장...지사까지 나섰다	16
江原日報	01면	'수소클러스터 순항' 영월~삼척 고속道 예타에 호재	17

江原日報	02면	'수소클러스터 순항' 영월~삼척 고속道 예타에 호재	17
강원도민일보	05면	겨울에 때아닌 '물폭탄' ... 12월 호우·대설특보 동시 발령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특별자치도법 벤치마킹 필요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국민 대표성 걸맞은 후보 나와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민·관 물샐틈없는 방역 중요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장기 고물가·고금리에 민생은 곪아 터지고 있다	22

江原日報

2023 12 12 ()

0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갖고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03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엄윤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도의회 “급식실 환경개선 예산 집중 투입해야”

박관희 “노동자 생명과 직결” 강조

‘폐암 판정’ 등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교육계 노동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급식실 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박관희(춘천) 의원은 11일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내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본심사에서 교육부의 대상 학교당 급식실환경개선지원비 1억원을 두고 “올해 급식실환경 개선에 쓰인 사업비 평균이 한곳당 2000만원 수준”이라며 “오는 2027년 완료 사업이지만, 여러 학교에 예산을 분산 투입하거나 사용 시기를 당기는 등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급식소 환경 개선 사업이 (급식노동자) 생명과 밀접된 문제”라며 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지영(비례)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생에 스마트 단말기 총 8000대를 신규 지급 하는 것과 관련, “보급 이유가 막연하게 2025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만 나와있다”며 “(서류에) 쫓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숙 도교육청



박관희



이지영



엄윤순



박호균

교육국장은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을 한다”고 했다.

엄윤순(인제) 의원은 학생교복비 안정화 지원금이 올해 82억원 9100만원

에서 내년도 86억 9200만원으로 3억 5000여만원 증가한 것을 두고 “교복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교복을 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체육복으로 대체한다든지 방향전환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호균(강릉) 의원은 무기계약직인 ‘학교 보안관’을 자원봉사 위촉직인 ‘배움터 지킴이’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학교 보안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출근을 하는 등 소속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학교를 잘 아는 분들”이라며 “봉사 위촉직으로 바꾸는 건 교육청의 책임감 없는 꼼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화·이태윤

江原日報

2023 12 12 ()

03

“스마트기기 보급, 道 실정 맞는 세부계획 필요”

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사용 목적·사후 관리 등 지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지영(더민주·비례) 의원은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한다고 하니 도교육청이 쫓아가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에게 전자칠판, 스마트기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등 목적, 체계적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임윤순(국민의힘·인제) 의원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스마트기기) 효과성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며 “학생 상당수가 스마트기기 사양이 좋지 않아 개인 기기를 구매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도 “스마트기기 단말기 보급 교체주기를 고려해 사양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미(더민주·원주)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도내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모든 아이가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낙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도서관 자가대출 반납기 예산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관현(국민의힘·태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대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 기준으로 200개교를 지원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대당 2,300만원으로 편성했다”며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도교육청이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학교 보안관 제도가 강화돼야 한

다고 지적한 박호균(국민의힘·강릉) 의원은 “학교 보안관이 점차 감소되고 배움터 지킴이가 신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정기자together@

2023 12 11 ()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주력...인력 부족에 전문성 우려도

앵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는 도정 전반에서 감사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과 업무 범위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감사의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억 원이 들었지만 빈손으로 끝난 드론택시 시제기개발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책임자를 수사의뢰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라고 처분했습니다.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2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실증과 동해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등 굵직한 현안도 들여다 봤습니다.

전임 도정 사업 뒤지기라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도정에 긴장감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84개에 달하는 민간 기업 지원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검증 대상 사업비만 4,000억 원이 넘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은 강원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 110곳이 넘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엔 강원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30곳까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인력은 44명 수준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원은 5명 뿐입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미선/강원도의원 : "34개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인력 부족을. 현재보다는 충원될 필요성은 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의 형태가 단순 재무 감사에서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종합 감사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박동주/강원도 감사위원장 : "도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답변을 해서 도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력 보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년, 강원도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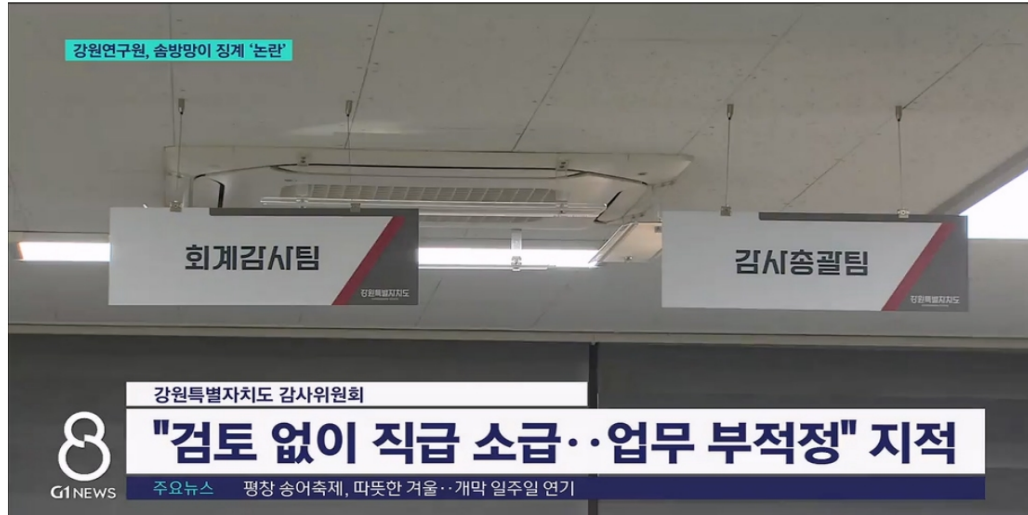
박성은

2023 12 11 ()

G1방송

강원연구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앵커]

강원연구원 인사위원회가 최근 '부적정 승진' 논란을 빚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관련자들을 경징계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8월, 강원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연구원 채용 시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음에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지난 3월 3년이 지난 직급을 소급해 상향 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임금 차액 3천여만 원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릿지▶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 간부 등 4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요구로 최근 관련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 강원연구원.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2명을 포함, 징계 대상자 4명 모두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징계의 경우 '정직' 이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모두 경징계인 '감봉' 이하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위의 요구를 연구원이 무력화했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릅니다.

지난달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 인사가 지적됐었는데,

당시 강원연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이번에 (강원연구원) 자체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건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연구원 내부 인사위원회의 재량"이라면서도,

"경징계 처분 근거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22

전찬성 도의원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전찬성(원주·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수여하는 '2023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11일 수상했다. 전 의원은 강원도의회 연구모임인 '지수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해양쓰레



기대책 마련 등 친환경 정책을 제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전 의원은 "지역 사회 환경문제 해결 등 친환경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12 11 ()

전찬성 도의원, 신성열 춘천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환경 친화적 정책 대안 제시 공로



전찬성 도의원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신성열 춘천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평가하는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전찬성 도의원을 비롯한 5명, 기초의원 가운데 신성열·곽문근 시의원 등 8명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전찬성 의원은 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치수연구회에서 활동하고,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대 촉구 등 친환경 의정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찬성 의원은 "강원의 순환 경제 관련 시책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일이라면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사회 환경문제 해결 등 친환경 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했다.

2023 12 11 ()

전찬성 강원자치도의원,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박종성 기자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이 친환경 의정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는 12월 11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해 온 친환경 우수 의원 발굴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 3천500여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이를 위해 이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공적서를 토대로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성, 개선 실현성 등의 가치를 평가해 최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치수연구회 활동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 및 관련 예산 확대 촉구 등 친환경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친환경 의정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찬성 의원은 “강원의 순환 경제 관련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열정을 쏟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역 사회 환경문제 해결 등 친환경 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kakao.com

46

江原日報

2023 12 12 ()

21



원미희 의원 대한민국공헌대상 원미희(국민의힘·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주최 제4회 대한민국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공헌대상을 받았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04



양양서 강원농업의 미래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는 11일 쏘비치 양양에서 '청년과 스마트가 함께하는 강원 농업의 미래 워크숍'을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2023 강원문화포럼이 11일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이해규 강원예총 부회장, 강승진 춘천문화도시센터장,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대표, 황운기 문화프로덕션 도모 이사장,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장, 송경희 행복한상상(주) 대표, 권현아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목선혜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문화예술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김남덕기자

“문화예술교육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도 주최 강원문화1차 포럼

“사회·학교로 나누지 말고 학생·시민 참여 예술의 장 필요”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사회와 학교로 양분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는 11일 커먼즈 필드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강원도가 주관한 강원문화 1차 포럼 ‘강원문화예술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권 대표는 “사회문화예술 교육, 학교문화예술 교육 등 두트랙으로 진행됐던 과거 이분법적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와 학교로 나눠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굳이) 나누지 말고, 공공의 성격을 지닌 문화예술 공간을 학생,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場)으로 재탄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 방향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을 예술답게, 예술적 언어로 나누는 교육이 교육 현장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예술의 본질인 창의성·창조성을 발현해 낼 상상력을 어떻게 가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장과 송경희 행복한상상(주) 대표의 발제에 이어 강승진 춘천문화도시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밀도 있는 교육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가 얼마나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24년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강원도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계에서 한 목소리를 담아 각 지자체를 압박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해규(춘천연극제 이사장) 강원예총 부회장은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곳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을 투입해 문화예술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길 바란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문화예술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을 기대해본다”고 했다.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전문가들과 함께 강원문화예술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감사드린다”며 “강원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예술 교육을 개발하고 이어나가는 데 강원문화재단도 적극적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김민희·김오미기자

江原日報

2023 12 12 ()

19

노인정책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게 투자는 사회적 낭비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노인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월 제11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가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직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향후 고령층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1년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노인 절반이 ‘고용 정책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향후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고용 관련 지원으로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와 ‘취·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꼽았다.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은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간주, 노화로 발생하는 ‘돌봄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가 노인으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는 노인의 ‘능력’과 이들이 보유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원포럼

정재웅 강원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노인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신중년·노인 일자리는 일정 수준 소득이 보장되고 사회 기여가 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10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강원도정은 강원자치도 광역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심기관 설립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먼저 강원지역 수행체계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해 모든 수행기관이 수급하고 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모습이 선결돼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강원자치도 노인일자리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을 능력 있는 주체로 바라보기

첫째, 강원지역 내 수행기관 중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 어디인가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강원자치도도 지역특성 기반 아이템 다양화와 자체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춘천시는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자자체 기반구축 사업으로 ‘춘천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퇴직 후 일자리, 사회조직 등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사회참

대한 일반화된 공감각이 필요하다. 둘째,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야 한다. 셋째, 도정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원자치도만의 특색은 갖춰, 전국 노인일자리의 정책과 실천 방향이 잘 부합돼야 한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다. 강원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이 추진되고, 노인을 ‘능력’ 있는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17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12일 오후 2시 강릉 라카

이 샌드파인 라카이볼룸 I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동해안권 도민설명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14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강원특자

도의회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농지분야 위임조례 설명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13

지역본부 신청사에서 열리는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17



야위임조례 설명회에 참석한다.

김용복(고성·왼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농지분



엄윤순(인제·왼쪽)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2일 오후 2시 산림조합중앙회 강원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10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12일 오후 2시 산림조합중

앙회 강원지역본부 신청사에서 열리는 청사 개청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10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7시 30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정기 연주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2 12 ()

21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



산업부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 춘천 스카이컨벤션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

19회 바이오인의 밤 송년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02

실질적 특례 담긴 강특법 3차 개정안 '국회 1호' 법안 추진

<22대>

특별자치법 난립 선제 대응
실무단 70여개 입법과제 선정
첨단산업·특화산업 특례 등 포함
기업유치 전략 상속세 감면 핵심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
다. 이는 전북특별법과 중부내륙특별
법이 국회를 통과(본지 12월 11일자
1·3면)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동
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

기된 가운데 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 '미
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
한 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 특례 등을
실질적으로 담아내겠다는 전략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
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비
전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도와 시·군,
도내 대학, 도의회, 강원연구원으로 구
성된 13개 실무단이 총 70여 개의 입법
과제를 추렸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
기 위한 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 특례

를 비롯해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 특례 △외국
인 유입 특례 △폐광지역 특례 등이 주
요 입법과제에 올랐다.

특히, 3차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기
업유치를 위한 상속세 감면 특례다. 이
와 관련, 김진태 지사는 11일 "기업 유
치를 위한 상속세(감면 특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백년기
업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요건을 갖
춘 기업이 없어 20년, 30년 된 기업에
백년기업상을 주고 있다. 기업 상속이
가능한 상속세법(감면 특례)을 역점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감면 특례는 수혜 대상 기업
을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
구·지구 △기회발전특구에 이주·신설
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상속
세·법인세 감면 등이 적용되는 기회발
전특구를 내년부터 전국 시·도에 지정
한다. 상속세 감면 특례는 정부가 떠온
상속세 감면 등을 강원도가 우선 시행
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강원도는 당초 3차 개정안을 연내 국
회에 발의하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강원특별법 3

차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부내륙특별
법·전북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
는 등 '특별자치법' 난립을 고려한 조치
다. 여기에, 현행 강원특별법이 내년 6
월 시행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김 지사는 "정부 부처에서 '2차 개정
안 시행 전에도 3차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이런 여론이 많
아 있다"며 "숨고르기를 해 다음 국회에
1호 법안으로 (3차 개정안을) 제출하
려고 한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02

도교육청, 학교시설 환경개선 5년간 2조3639억원 투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5년간 2조
3639억원을 투입해 강원도내 학교시
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개선에 나선
다. 11일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환경개
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어진 지 40년 이
상된 노후 교사시설에 대한 공간 재구
조화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000억원 등 총 92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향후 5년간 총 84개
동, 연면적 20만㎡을 대상으로 시설재
구조화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재구

조화가 완료되면 오는 2033년에는 노
후 교사시설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시설 개선도 이
뤄진다. 내진보강과 화재예방 등 안전
예방 사업에 총 2693억원이 투자되며,
특히 내진보강은 정부 계획보다 1년 앞
서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화장실 개
선에는 5년간 6061억원이 투입되고,
학교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수선에도
4607억원이 지원된다. 정민영

‘건당 14만원’ 고향사랑기부 전국 상위권

◇1~10월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금액

시군구	기부건수	금액
도	793	145,898
춘천시	1,532	171,384
원주시	957	185,237
강릉시	1,843	167,629
동해시	1,358	146,604
태백시	586	124,442
속초시	1,002	112,163
삼척시	1,354	164,791
홍천군	784	139,334
횡성군	923	120,555
영월군	877	152,479
평창군	1,358	204,218
정선군	732	105,520
철원군	1,103	161,498
화천군	518	76,139
양구군	396	84,623
인제군	649	90,455
고성군	623	122,249
양양군	326	45,963

(단위:건/천원)

강원 전국 평균보다 23% 더 많아... 누적금액 25억2,118만원
17개 시·도 중 세 번째... 평창군 2억421만원 기부 도내 최다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부액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기부금액은 1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3% 많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강원자치도 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기부금액은 25억2,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39억2,438만원), 경남(35억3,717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같은 기간 도내 총 기부건수는 1만7,714건으로 집계됐고 건당 기부금액은 14만2,327원으로 전국 평균(11만5,612원)보다 23.1%(2만6,715원) 많았다.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평창이 2억421만원으로 기부금액이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25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어 원주(1억8,523만원), 춘천(1억7,138만원), 강릉(1억6,762만원), 삼척(1억6,479만원) 등의 순이다.

총 기부 건수와 기부금액을 나눈 건당 기부금액으로 보면 양구(396건, 기부금액 8,462만원)가 21만3,694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태백(21만2,358원), 고성(19만6,226원), 원주(19만3,560원)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로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임영빈 강원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팀장은 “납부된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과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leekh@

道 국가지방협력 특교세 2억 확보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공모를 통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 타 기관과의 협업 활동, 성과 등을 중점 평가했다.

강원자치도는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월별로 선정해 초등생,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과 함께 라디오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또 도내 기관·단체와 협업해 수요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안전내용을 담은 안전문화콘서트와 재난영화

상영회, 노인 대상 혈압측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심사 결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한 점, 실생활과 연결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원자치도는 이와 함께 산간계곡·하천 상류지역 강우상황을 관측해 위험 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등에게 경보발령과 안내방송이 가능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양구 고방산지구 4억원, 정선 향골계곡에 3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12 12 ()

江原日報

02

김진태 지사 “강원FC 내년 투자 늘릴 것”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극적으로 K리그1(1부 리그)에 잔류한 강원FC에 대해 내년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당초 예산안에 강원FC 지원 예산이 60억원이 편성돼 제출됐다. 금년에는 120억원이었다”고 말한 후 “(지원예산이)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당초 예산일 뿐이고 내년에 추가 편성해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담을 예정이니 선수단은 경기력만 배가시키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인 승부를 펼친 선수단에는 특별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수원 삼성과의 리그 최종전에서 선수들에게 (보너스 지급을)약속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수원 삼성과의 리그 최종전, 김포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2차전에 모두 참석해 선수단을 응원하는 등 구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강원FC가 살아 돌아와 다행이고 짜릿했다. 내년에는 미리 안정권에 들어 올해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웃음)”고 당부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2023 12 12 ()

강원도민일보

02

김 지사 “춘천 분구안 환영, 의석수 늘려 공룡선거구 해결을”

속보=김진태(사진) 도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춘천 분구안(본지 12월 11일자 2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6개 시·군을 묶은 공룡선거구가 도출된 것과 관련해선 의석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춘천(분구)에 관해서는 아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전부터 원했던 춘천 단독 분구 내용이 나왔는데, 정치권에서는 왜 환영한다 이



런 얘기를 못 하나”면서 “그건(춘천 분구) 환영하되, 6개 지역이 합쳐진 공룡선거구가 나온 문제점은 의석을 하나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룡 선거구가 문제이니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춘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춘천 분구를 지키되, 강원지역 추가 의석수를 확보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으로 묶인 공룡선거구를 재조정하자는 주장이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01

춘천 사회단체 단독분구 주장...지사까지 나섰다

인구 상한 초과 분구 자격 충분
21대 총선 기형적 선거구 혼선
이통장연합회·변영희 움직임
김진태 지사 "단독 분구 환영"
1석 추가로 공룡선거구 해결"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춘천 단독분구가 뜨거워진 감자가 되고 있다. 춘천권 사회단체는 물론 김진태 지사까지 나서 단독분구를 주장하면서 분구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이통장연합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갖고 춘천 단독분구 촉구방안에 대해 이·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신영목 춘천시이통장연합회장은 "춘천은 내국인 인구 28만으로 분구 상한선(27만1042명)을 초과, 단독분구의 자격을 갖췄다"며 "지역 안에서 국회의원 두 명을 배출해 지역의 영향력과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춘천시변영회도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검토하고 있다. 이승호 춘천시변영회장은 "춘천 단독분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선거구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영회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춘천 단독분구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현안이다. 춘천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춘천갑과 을 선거구로 나눠 총선을 치렀다. 그러나 이후 출구 의석 1명을 유지해왔다.

춘천은 인구기준으로 분구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8석으로 묶이면서 21대 총선에서는 기형적 선거구로 조정됐다. 21대 총선에서는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



동 등 6개 지역 5만 6000여 명이 철원·화천·양구와 묶여 춘천·철원·화천·양구 읍이, 나머지 19개 읍면동이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됐다.

이로 인해 춘천을 선거구로 편입된 지역은 각종 현안이나 지역 정체성, 대표성 등에서 '또다른 춘천'이라는 혼선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준해 춘천시 신북읍이장협의회장은 "철원·화천·양구는 온전히 지역 전체가 포함됐는데 춘천은 일부만 선거구로 묶여 있으니 춘천사람으로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춘천시의회는 지난 4월 '춘천 단독 분구 및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춘천 단독분구를 환영한다"며 "6개 지역이 합쳐진 공룡선거구가 나오는 문제점은 의석을 하나 더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 관련기사 2면

江原日報

2023 12 12 ()

01

‘수소클러스터 순항’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에 호재

국내 수소산업 양대 축인
평택~동해·삼척 관통 노선
경제성 비약적인 상승 기대

속보=‘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본보 지난 7일자 1·2면 보도)의 나비효과가 영동 남부 최대 숙원사업인 영월~삼척고속도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수소산업의 양대축인 서해안의 경기 평택과 동해안의 동해·삼척을 관통하는 도로라는 점에서 경제성의 비약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내년 3월께 나올 전망이다.

산악지형을 관통해 건설비는 높고 경제성은 다소 낮다는 점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원자치도와 노선이 지나는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은 131개 장래 개발계획을 발굴했으며 이 중 파급효과가 큰 40여개 사업을 추려 정부에 제출했다. 3,177억원이 투입되는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이 중에서

도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인 평택~제천~영월~삼척고속도로 시종점은 경기 평택과 삼척이다. 평택은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국내 최대 수소충전 시설을 갖춰 수도권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12 12 ()

02

‘수소클러스터 순항’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에 호재

-1면에서 계속

2028년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준공 시 국내 최대 수준인 일일 30톤의 수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제천~삼척고속도로는 동·서해안의 수소산업 거점과 생산기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한다.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의 수소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도는 제천~삼척고속도로가 미래 ‘하이드로젠 하이웨이(수소 고속도로)’ 기능을 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필사적으로 어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수소 클러스터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계획이 준비되고 있어

향후 제천~삼척고속도로의 유발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05

겨울에 때아닌 '물폭탄' ... 12월 호우·대설특보 동시 발령

특보DB 구축 25년만에 첫 사례
산지 눈·비 섞여 많은 강수 예보
당분간 평년 웃돌다 강추위 전망

강원도에 극단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1999년 특보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 이후 25년간 처음으로 12월에 호우특보가 발표됐고, 도내 북부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한 특보 구역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것도 같은 해 이후 처음이다.

■ 겨울비가 웬 말

강원 영동과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때아닌 겨울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11일 삼척 평지와 북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강릉과 동해, 속초 등 영동 일부 지역과 강원 중·남부 산간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강원도 호우 특보가 내려진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기상청은 "남서쪽에 서 다가온 저기압이 큰 온도차로 강력하게 발달해 여름처럼 비가 쏟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는 영서의 경우 오는 12일 오전 9시까지, 영동은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의 경우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영서는 40mm로 예보됐다. 11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삼척(원덕) 167mm·미시령 156.5mm·양양(영덕) 129.5mm·삼척(공촌) 122mm·강릉(옥계) 120.5mm·북강릉 103.8mm·양양(오색) 95mm 등이다.

■ 산에는 대설경보

강원기상청은 11일 오전 9시 30분쯤

11일 강원 영동 호우·대설특보 현황

호우 주의보	- 삼척 평지 - 강원북부 산지
호우 예비특보	- 강릉 - 속초 - 양양 - 강원 중·남부 산지
대설 경보	강원도 북부 산지
대설 주의보	태백, 중남부 산지
대설 예비특보	고성군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경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12일까지 강원 북부 산지는 많은 곳은 4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 강원 중·남부 산지에도 15~3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고 대설 주의보를 내렸다. 강원도에 12월 중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발효된 것도 역시 1999년 이후 첫 사례다. 많은 비가 내리는 영동 북부의 비가 눈을 바뀌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강원도 산지의 낮은 고도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려면서 많은 강수량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5시 기준 적설량은 함릉봉 47cm·미시령 5.4cm·진부령 3.5cm·구룡령 0.5cm로 확인됐다.

■ 비·눈 끝나면 매서운 겨울날씨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강원도내 전역에 비가 내린 후 오는 13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영서 0~5도, 강원 영동 3~6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6~10도, 영동 5~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하지만 오는 13일부터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진다. 14일부터는 또 한차례 비가 내리고 강원도 영서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신재훈 ericjh@kado.net



강원 북부 산지에 호우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진 11일 홍천시장에서 군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 19

특별자치도법 벤치마킹 필요

-전북 자치·특례, 강원 3차 개정예 참고해야

지난달 강원과 제주·세종·전북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연대를 다짐한 가운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습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28개였던 조문 수를 확대, 농생명,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 특구 등 131개 조문이 담겼습니다.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차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는, 기존의 계획에 전북의 경우를 참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원특별법과 유사한 법 조항이 다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의 1, 2차 개정 사례가 전북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북특별법은 정책과 밀접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농생명 산업 지구 지정 및 지구 내 농업 진흥지역해제 권한 이양 외에도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국제 K팝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교육정책 측면에서의 특례도 반영됐습니다. 강원특별법에서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제외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는 도내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 2개 이상의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시·군 통합과 관련, 현행법에선 먼저 각 지역 주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을 통해 보다 수월한 시·군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강원을 비롯한 제주, 세종 등 앞선 특별자치단체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경우 그동안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분야의 규제 해소와 특례 규정을 지속해서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규제가 많아 발전이 지체됐던 지역적 특성상, 마땅히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평가할 만합니다. 3차 개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과 제주·세종 등 타 특별자치단체의 법안을 벤치마킹해 정책 중심의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만간 발표할 첨단산업 집중 육성 등 강원도의 후속 개정예 기대가 큼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2 ()

/ 19

국민 대표성 결맞은 후보 나와야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공직 책무성 무거워

12월 12일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선거구 확정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내년 4월 10일 치르는 총선을 향한 실질적인 행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제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출마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아닌 신인 정치인의 정치 분야 진입 장벽을 걷어내기 위한 제도이므로 새로운 얼굴의 후보를 중심으로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은 8석을 놓고 지역선거구를 조정 중이나 변수는 없지 않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여야 각 정당이 사활을 걸지 않은 적이 없긴 하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을 비롯해 신당설, 소수 정당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현역의원 용퇴와 교체 및 상향식 공천 과정과 기준 설정 등 다양한 쟁점이 잠복해 있는 안갯속이어서 어느 때보다 선거 의제에 변동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해 온 정치 신인들은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설과 소속 정당을 표기한 옷 착용, 거리 홍보, 후원금 모금을 위한 선거사무원 활동,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선거에 돌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연말연시 크고 작

은 행사와 모임이 잦아지는 때여서 예비후보 간 신경전 속에 시민 관심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해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중차대한 기능을 합니다. 삼권분립의 큰 축으로 국정감사 등과 같은 권한 행사를 통해 행정부처 및 사법부에 대해 견제 통제하는 역할 및 헌법에 기초한 국민 권리를 신장하는 입법 기관입니다. 국회의석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높이고 사적으로 부를 쌓는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그 폐해는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를 하게 되면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이 돼 돌아옵니다.

과거 선출직이 국민 의사를 저버리고 부패 비리에 연루되고 무능한 상황을 발생시켰음을 상기하고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선거일에 이르는 1년 동안 걸친 전 총선 과정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당과 의회 기능 활성화에 효과를 내는 장이어야 합니다. 단지 '자리'로 여겨진 흙탕에서 이익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江原日報

2023 12 12 ()

/ 19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민·관 물샐틈없는 방역 중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도내 동물방역 당국과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겨울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 조류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된 이후 지난 주말에는 전남과 전북, 충남 아산의 오리 농장까지 고병원성 AI의 감염이 이어졌다. AI는 한번 발생하면 확산속도가 빠르다. 또 치사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11개 시·도에서 75건이 확인돼 660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도내에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원주 산란계 가금농장에서 1건, 야생 조류에서 3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AI 바이러스는 축사 내 먼지나 분변에서 5주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된 가금류의 호흡기나 분변에서 대량 방출돼 인근 농장 등으로 전파될 우려가 크다. 매개체도 차량, 사람, 장비 등부터 야생 철새까지 다양하다. 선제적 방역이 최상의 예방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렘피스킨, AI 등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4개가 모두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사료 값과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은 대폭 늘고 축산물 값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다.

여기에 방역 비용까지 증가하고 있으니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소 바 이러스성 감염병 렘피스킨이 백신접종 완료로 간신히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ASF 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야생 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에서 지난해 878건, 올해 10월 현재 558건으로 감염이 잦은 지역에서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1년 내내 가축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축산농가인 셈이다. 이래서야 앞으로 가축을 키워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더 이상 가축전염병이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의 물샐틈없는 방역이 필요한 때다.

가축전염병에 한 번 뿔리면 농가는 물론 지역사회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본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이다.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 발생→살처분’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가 또한 마찬가지다. 자기 농장과 가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도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江原日報

2023 12 12 ()

/ 19

장기 고물가·고금리에 민생은 끓아 터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실물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 기대는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개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아파트 경매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강원도(본청)의 채무액 규모는 1조 1,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9조5,052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12.18%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0.15%), 대구(18.91%), 울산(17.56%), 부산(17.55%), 광주

(17.19%), 세종(14.45%), 제주(14.28%)에 이어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다. 고금리에 1년 새 아파트 경매건수도 75%로 폭등했다.

11월 강원자치도 내 아파트 경매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전월(97건) 대비 8.2%, 전년 동월(60건)과 비교하면 무려 75.0%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로 불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는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도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128곳의 대출 잔액은 올해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용자 수는 2,904명으로 25% 증가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서민들이 급전을 빌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들 최후의 보루인 ‘전당포’만 놓고 보면 실상은 더 심각하다. 도내 15개 전당포의 대출 잔액은 16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6% 감소했지만, 이용자 수는 2,118명으

로 18% 증가했다. 소액 자금도 구하지 못해 전당포를 찾는 인원이 늘었다는 의미다.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물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당분간 고공행진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금리 직격탄을 맞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카드 돌려 막기로 버티는 신용 취약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10월 신용카드 9개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조4,9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5% 급증했다.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 128곳 대출 잔액

올해 90억원 전년 대비 40% 증가”

11월 아파트 경매 105건, 전년 대비 75% 증가

대환대출이란 카드 빚을 못 갚고 연체한 사람이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다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다중 채무자 연체율도 1년 전

(0.75%)보다 2배 이상 뛰어 1.78%로 높아졌다. 3분기 말 현재 전업 카드사 7곳의 평균 연체율 역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1.67%에 달한다. 실물경제의 싹쓸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여건도 마찬가지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조 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였다.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데다가 고물가와 공공요금 증가로 비용마저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다.